

고령사회의 위험성(危險性)에 관한 고찰(考察)

조현상 (대전신학대학교)

I. 머리말

II. 이론적 배경

1. 고령사회 노인 인구현황과 추세
2. 선행연구와 정책 동향

III. 고령사회의 위험성 유형 일반(一般)

1. 개인적 곤란의 문제
2. 공적(公的) 쟁점의 문제

IV. 고령사회의 위기 대처 방안

V. 맺는 말

• ABSTRACT •

A Study on the Riskiness of Aged Society

Joe, Hyeon Sa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isks and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that are already with us in Korea, and then, to propose some solutions of those risks and problems. The Aged society has reached a peak due to the combination of a low fertility rate and increased longevity

Mostly the current social problems that arise as a result of an aging population are divided into many parts in term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which might be a time bomb for the future unless our society was a rigid and right way to face the coming social phenomenon so called the Aged Society. The government may have to take great pains to support and to care for the aged people as well.

Since the adopt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in 1981, various policies have been piled up as the risks and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get more serious. However, the present enactments for the welfare of the aged are not good enough to meet all the risks such as income security, medical security, labor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ecurity so that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more various laws and systems are needed to be prepared and put in to place.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were classifi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First, the most aged people will suffer from lack of regular income. Second, the most aged people will suffer from illness without sufficient income. Third, the idea that aged parents support is to be changed the private support first principle to a public aid system.

In order to meet the above mentioned risks the subject of an aged society and the problems must be solved by both the governmental and the private sectors.

It is not to be pessimistic, provided we coordinate an effort of an aged society rather it could be far different than what we are thinking in a gloomy way about an aged society.

Key words: aged society, new social riskiness, parents support problem,
income security, social welfare.

I. 머리말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해 인류가 바라던 가장 오래된 숙원 중 하나는 장수(長壽)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비롯된 급속한 경제발전은 보건위생 및 의료와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으로부터 세계 인구의 평균수명이 점차 길어졌다.¹⁾ 이러한 추세는 전지구적 현상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 보편화 되었으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09년 UN의 한 보고서는 수명연장을 표현하는 100세시대(Homo Hundreds)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에는 6개국뿐이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호모 헉드레드 시대’로 정의한 것이다.²⁾

일반적으로 노년은 제2의 인생,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Golden Age), 여가와 안식의 시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늘어난 수명은 모든 인간의 바람대로 축복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수명 연장이 개인적·사회적 재앙의 모습으로 다가 올 수도 있음을 간과(看過)할 수 없다.

-
- 1) 19세기까지 20대에 그치던 전 세계인의 평균기대수명은 21세기에는 60대에 도달했다.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 역시 20세기 후반에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구한말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22.6세, 여자 24.4세로 평균 23~24세에 그쳤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30세를 넘긴 것은 1925년이다. 그 이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급격히 증가해 1970년에는 60세, 2010년에는 80세에 도달하였다. 박명호, 「한국과 EU의 고령화 비교 연구」, 『EU학 연구』16권 1호(2011), 100.
 - 2) ‘호모헉드레드, 호모헉드레드(Homo Hundreds) 100세시대 준비하는 방법’, KBS 특별기획, 2011, 12, 15. 한편 2009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약 8%로 세계 인구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여 보면, 선진국은 16%이고 후진국 6%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 3%, 북미 13%, 라틴 아메리카 6%, 아시아 7%, 유럽 16%, 오세아니아 10%이다. 이성용 외, 「인구변천과 인구고령화 :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의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제15권 제1호(2011), 552.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질병과 상해에 취약해 지고 이전까지 영위하던 소득수준의 감소로 인한 재정적 교환자원의 고갈화(枯渴化)가 이루어진다. 또한 노화(老化)의 변화에 순응되지 못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함께 찾아 올 수 있다. 그럼에도 여가시간의 증가와 경제적 안정이 담보된 경우에는 노동으로 부터의 해방과 물질적 풍요로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³⁾ 그러나 수명연장으로 인한 인류의 고령화 현상은 바라던 바와 같이 행복한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나아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전체의 노력과 관심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노년층 자신은 물론 가족, 이웃, 친지 나아가 국가사회 전체의 당면 문제로서 공동체의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 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高齡)사회현상이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인인구의 수가 증가하는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사회에서의 인구학적 변화는 인구의 연령별 전체 구성분포의 변화를 나타낸다. 특히 저출산의 추세로 고령인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출생률의 편차에 의해 고령화의 지표는 달라진다.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6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불과 72만 6천명(전체인구의 2.9%)이었는데⁵⁾, 1970년 3.1%에서 1990년에

3) 조현상, 「高齡社會 노인의 사회적 위험에 관하여」, 『신학과 문화』 제21집(2012), 246.

4) 조현상, 「高齡社會 사회복지주체로서 敎會役割에 관한 연구」, 『신학과 문화』 제22집(2013), 309.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사회' 혹은 '고령사회'는 일반적으로 고령화 이후의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의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이후 가급적 고령사회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는 5.1%, 2000년에는 7.2%에 해당하여 한국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545만명(11%)에서 2030년 1천269만명(24.3%), 2060년엔 1천762만명(40.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대로 라면 50년 뒤엔 인구 10명 중 4명이 고령인구인 셈이다. 이에 앞서 2026년엔 고령인구가 20.8%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⁶⁾

우리나라의 고령인구의 변화 추세는 서구의 대표적인 고령사회국가들의 변화 속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률과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⁷⁾ 서구사회의 고령국가들은 고령화사회 이후로 초고령사회로의 변화 기간이 우리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 따라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으며 인구학적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20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⁸⁾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고령사회 현상으로 인한 노인문제가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심 밖에 있던 노인문제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의 공식적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⁹⁾ 최근 노인인구의

5) 박선태 외, 『노인복지론』(서울:고양시 2012), 14.

6) “한국 인구 2030년 5천200만명 ‘정점’”, 연합뉴스, 2011, 12, 7. 제7면.

7) 안종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 『연구총서』97-10-1(2010), 3.

8) 정순돌 외, 「사회복지학 분야 ‘고령화 사회’ 연구동향 : 인식과 대책」, 『사회과학연구논총』27권(2012), 276.

9) 정환수, 「한국사회 노인문제에 관한 철학적 고찰」, 『철학논총』제71집(2013), 336.

빠른 증가로 인하여 노인관련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¹⁰⁾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의 추세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고령시대는 당사자인 노인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과제로서 고령사회를 맞는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더불어 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위험한 예측 일변의 사조(思潮)에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할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첫째, 우리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둘째, 학계의 선행 연구들과 정부정책의 중요한 관점들을 되짚어 봄으로 고령사회의 위기적(危機的) 요소(要素)들을 정의할 것이다. 셋째, 고령사회로의 변동에 따른 사회적 위험요소들에 대한 유형의 분류를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은 기존의 논의들을 재정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넷째, 고령사회를 부정적 위기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문제 해결 방안들과 관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요약하고 도출된 결과의 함의를 설명할 것이다. 이 논문은 고령사회 현상으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또 다른 연구들에 원자료(general idea)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주제의 포괄적 범위로 인해 탐구밀도가 약할 수 있는 것이 한계(限界)가 될 수 있다.

10) 1992년 유엔 총회에서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정하여 21세기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각국의 노인문제 및 노인 복지 대책에 관심을 요구하자 한국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신영전 외,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 고령화 정책 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제20집 제1호(2013), 158.

II. 이론적 배경

1. 고령사회 노인 인구현황과 추세

노인¹¹⁾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때 한국노인복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 노년학회와 Breen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¹²⁾ 노인을 특정연령집단으로 분류할 때 55~74세의 노인을 연소노인(Young-old), 75~84세의 노인을 고령노인(older-old), 85세이상의 노인을 후기노인(oldest-old)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학자에 따라 60~64세의 노인을 연소노인(Young old), 65~74세의 노인을 중고령노인(middle-old), 75세이상의 노인을 고령노인(older-old)으로 분류한다. 또한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 신체기관과 구조, 기능의 시간경과에 따른 노인연령(육체연령)으로 40대 初老(초로), 50대 中老(중로), 60대 耆老(기로)로 나누기도 한다.¹³⁾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지형을 통해 고령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때 선행적으로 숙지해야할 두 가지의 개념이 등장한다. 첫째 노령화 지수라는 것으로 노령화지수는 0-14세 100명당 65세 이상의 인구의 수로 정의된다.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으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세미만 유소년 인

11)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개념은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이상으로 한다. 한편,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는 55세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로 노인의 연령을 특정하고 있다.

12)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생리적,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노화과정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둘째,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셋째,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체의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다섯째,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되어 환경변화에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다. 고재욱 외, 『노인복지론』(파주:양서원, 2013), 11.

13) 고재욱 외, 『노인복지론』, 13.

구의 수보다 많음을 뜻한다. 2010년 현재 노령화지수는 67.7이며, 2016년에 이르면 100.7명에 달해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⁴⁾ 또한 2050년 429로 무려 9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중위연령이라는 개념이다. 한 사회의 인구고령화 수준은 그 사회의 중위연령(median age)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중위 연령은 전체인구를 가장 연소자부터 가장 연장자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으로 정의한다. 2005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34.8세이지만 2050년에는 56.7세에 도달하여 45년 동안 21.9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50년에는 한국인구의 절반이 56.7세 이상의 인구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⁵⁾ 위의 두 개념을 통해서도 고령사회의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

〈표 1〉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단위 : %)

	1970	1990	2000	2012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42.5	25.6	21.1	15.1	13.2	12.6	11.2	9.9
15~64	54.4	69.3	71.7	73.1	71.1	63.1	56.5	52.7
65세이상	3.1	5.1	7.2	11.8	15.7	24.3	32.3	37.4
65~74세	2.3	3.5	4.9	7.1	9.0	14.6	15.8	15.3
75~84세 (75세이상)	(0.8)	(1.6)	2.0	3.8	5.1	7.2	12.4	14.4
85세 이상	-	-	0.4	0.9	1.6	2.5	4.1	7.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14) 조현상, 「高齡社會 사회복지주체로서 教會役割에 관한 연구」, 23.

15) 이성용 외, 「인구변천과 인구고령화 :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의 비교연구」, 562-563.

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7.2%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며, 2026년에는 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야흐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30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중역시 17.4%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2010~2035 장래가구추계’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2035년에 10가구 중 4가구는 가장(家長)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고령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2012년 현재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중은 18.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2013년 현재 125만 2,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0.4%이다. 향후 2035년에는 23.2%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¹⁷⁾

2. 선행연구와 정책 동향

선행된 고령사회관련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의 주된 논의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고령사회로의 사회변동에 따른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고령사회 관련 문제의 성격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연구들과, 둘째,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노년세대에 한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의 마련을 강조하는 연구들이다. 두 가지 연구들의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고령사회로 인해 대두되는 노인관련 문제들이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6) “속도 빨라진 고령화...일본 닮아가는 한국사회”, 동아일보, 2012, 04, 27. 제 8면.

17) “독거 노인 125만명..고독사 위험에서 구하라”, 미디어다음, 2013, 10, 03.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에서 비교적 논점의 흐름이 비슷한 최근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최재현(2013)은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특성 분석>에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주로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며 도시의 규모가 작고 인구증가 폭이 작을수록 고령화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도시규모가 클수록 고령인구의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어서, 수도권과 대도시형은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농산어촌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초고령지역에 해당할 만큼 고령화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민세진(2012)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취약성>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취약성지수로부터 표출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과 노년층의 빈곤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노인들에 대한 연금확장을 통한 소득보전의 방법만이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용호 외(2013)의 연구 <고령화에 의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장기적 메커니즘>에서도 한국의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과 투자율 감소, 노동력의 양과 질의 감소, 성장률 감소, 고령 인구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부족한 일자리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노인세대들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동반되고 유병율의 높음으로 비롯되는 개인적·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관류되고 있다.

특히 정순돌·김성원(2012)의 <사회복지학 분야 ‘고령화 사회’ 연구의

동향:인식과 대책》에서는 국내 사회복지학분야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책들에 대해 어떠한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¹⁸⁾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117개의 연구논문 중 99개에 해당하는 논문들에서 고령사회를 위기로 진단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기는 앞서 언급된 위기적 유형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학계의 연구 외 현실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도 고령사회의 여건 변화를 알 수 있다. 먼저 201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관련 통계¹⁹⁾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의료비 등의 사회적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180만명으로(31.8%) 2005년의 16.1%에 비해 두 배 정도 상승했다. 연금제도는 궁극적으로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주된 노력의 결실이었으나, 최근 연금이나 건강보호, 케어와 같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용 상승은 가족과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심지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²⁰⁾ 또한 이시기 65세이상

18) 이연구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사회복지관련 학술지 13개이며, 1992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간된 총 117편의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이들 논문들의 선정은 한국교육학술정보(RISS), DBPIA, KISS의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고령화와 '고령화 사회'를 키워드로 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술지는 <한국가족복지학> 5편, <노인복지연구> 27편, <한국노년학> 54편, <사회복지연구> 1편, <사회복지정책> 3편, <한국사회복지학> 5편,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편, <재활복지> 2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편, <사회보장연구> 5편, <장애인 고용> 1편 등이며, 이 중 99편의 논문이 고령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통계청에서는 2003년 이후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맞추어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고령자 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으며, 2012 「고령자통계」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고령자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2 고령자통계", 통계청, 2012. 9. 27.

20) 우국희, 「고령화 시대의 노인과 위험 담론」, 『노인복지연구』통권 53호(2011), 266.

고령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14조 8,384억원으로 전체의료비의 32.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다.²¹⁾ 이를 통해 노인 세대들의 유병율(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 퇴행성질환, 성인병 등)이 상당히 높고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11년을 기준으로 전년도(29.4%)와 큰 차이가 없이 2012년 29.5%에 달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OECD국가들 중에서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인구들의 소득구조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²²⁾

셋째, 부모부양에 관한 인식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38.3%는 고령 부모의 부양에 대해 ‘가족이 돌보아야한다’라고 응답하였고, 37.8%는 ‘가족과 정부·사회공동’의 부양을 원했으며, 18.4%만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모 부양은 가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반대로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와 ‘가족과 정부·사회공동’의 돌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제도적 부양 인식이 사회전반에 팽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지표들을 통해 살펴본 고령사회의 제(諸)부문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고령사회에서는 각종 연금과 의료보장에 투입되는 공적인 지출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이는 곧 사

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9월 13일 공개한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나타난 특징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한 달에 4일 이상 병원을 방문해 평균 26만782원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비중이 36%나 된다. “늙어가는 대한민국..노인들이 진료비 36% 썼다”, 헤럴드경제, 2013, 09, 13.

22) 송실대 황원일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가운데 노인 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이 가장 적다”며 “2009년 36.7%였던 노인 취업률이 올해(2013) 6월 40.9%까지 상승한 것도 차이나 정부에 의지할 수 없는 우리사회 노인들의 고달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인 100명 중 77명이 ‘가난하다’”, 한국일보, 2013, 08, 28.

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령사회의 노인인구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전히 경제활동을 원한다는 것과 이는 자아발전이나 실현과는 관계없이 생계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의 부양 부담에 관하여는 가족의 책임보다는 사회공동의 제도적 부양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고령사회의 위험성 유형 일반(一般)

최근 들어 사회적 위험²³⁾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직면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특히 취업기회의 협소한 조건은 경제활동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노인세대들에 있어서 사회적 위험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는 법률로 보장되는 사회보험의 영역을 초과 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영역에서 보장되어지는 국민연금(특수직역포함)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노인세대들만의 특정한 사회적 위험이 더욱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23)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이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근로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예컨대 질병이나 상해, 퇴직, 고용의 해지 등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를 지칭했으며, 최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으로 결혼, 출산, 고령화 등의 조건이 추가 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위험이란 소득의 상실 내지 중단을 상정하여 규정한다. 복지국가체제는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정규직의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복지국가체제의 중심적 가정(assumption)은 남성이 소득획득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는 반면, 여성은 가정 내의 돌봄 문제를 전담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에 따라 여성과 아동은 남성의 부양가족으로서 취급되었으며,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은 가족임금에 포함되었다. 강욱모,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돌봄 서비스 정책과제」, 『경남발전기획특집』(2010), 36.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상으로서 부양의 대상인 노인들, 즉, 고령사회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재편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같이 2011년 현재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40.2%)'과 '건강문제(39.8%)'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 고령자는 '경제적인 어려움(41.0%)', 여자 고령자는 '건강문제(42.7%)'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이 외 여타의 어려운 조건들로서는 소일거리가 없는 것과 외로움과 소외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단위 : %)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기타
2009		100.0	41.4	2.0	5.7	40.3	4.4	0.2	1.7	0.9	2.5	1.0
2011		100.0	40.2	2.4	6.0	39.8	4.1	0.2	2.7	1.1	2.5	0.9
성별	남자	100.0	41.0	3.9	6.9	35.7	2.9	0.2	3.9	0.7	3.9	0.8
	여자	100.0	39.6	1.4	5.4	42.7	4.9	0.2	2.0	1.4	1.5	1.0
연령별	65~69세	100.0	43.1	4.6	5.9	33.5	3.7	0.4	4.0	1.3	2.9	0.7
	70~79세	100.0	39.7	1.6	7.0	41.2	3.3	0.2	2.4	1.0	2.6	1.1
	80세이상	100.0	36.3	0.9	3.7	47.2	7.1	0.2	1.6	1.2	1.2	0.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3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빈곤율 변화' 자료에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층의 고단한 삶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²⁶⁾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이후 33개 OECD 회원국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 인구비율)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독 한국에서만 노인층 빈곤율 증가가 극심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0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 넣은 결과 2011년 말 한국의 전체 빈

24) 조현상, 「高齡社會 노인의 사회적 위험에 관하여」, 246.

25) "2012 고령자통계", 통계청.

26) "노인 100명 중 77명이 '가난하다'", 한국일보, 2013, 08, 28.

곤을 증가폭은 3년 전에 비해 0.1%포인트에 그쳐 OECD 국가 중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잘 극복한 나라로 손꼽힐만했으나, 노인 빈곤율은 평균의 19배인 1.9%포인트나 높아졌다. 2011년 노인 100명당 빈곤층이 무려 77명 선까지 늘어난 것이다.

한편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의 경우 중풍, 치매 등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오래 사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90% 가까이 이른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비율도 40% 정도에 이른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질환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자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4700명의 노인들이 목숨을 끊었으며, 이는 매년 전체 자살자 중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다.²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관련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타의 어려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연구에서는 노인관련 위험 유형을 더욱 세분화 하여 개인적 곤란(노인 당사자와 가족의 문제)의 문제와 공적 쟁점(사회와 국가차원의 문제)의 문제로 범주를 추가해 다음과 같이 위험성 분류를 정리한다.

27) 차홍봉,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가족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추계학술대회 발표문(2010), 5.

28) “자살老 내모는 사회”, 매일경제, 2013, 09, 06.

29) 실제로 2008년 자살자 중 61세 이상은 4029명으로 전체 중 32.8%에 이르렀다. 이는 41~50세(2381명, 19.4%) 자살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2009년에는 4673명(31.7%), 2010년에는 4945명(33.5%), 2011년에는 5151명(32.9%)으로 노년층 자살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 하고 있다. 노년층 자살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 개인적 곤란의 문제

노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소외로 비롯되는 경제적 어려움, 유병률 상승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독거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자립생활의 취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들은 예전부터 전형적인 노인 문제로 분류되었던 4궁(窮)인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2013년 Global Age Watch Index'의 보고서에서도 각국의 노인복지의 수준을 나타내는 분야를 크게 소득, 건강, 고용·교육, 사회적 자립·자유 등의 4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다.³⁰⁾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부양 기능의 약화와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된다. 특히 고령사회의 단면인 핵가족화의 가속으로 인해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붕괴되는 실정에 따라 가족 안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부양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곧 가족관계의 재정립, 가족내의 주거환경과 소비, 문화적 활동의 우선순위 배분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게다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노노(老老)부양이라는 초유(初有)의 문제 등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거 대가족제도에서는 노인의 부양문제가 자연히 해결되었으나 현재의 핵가족화 가족구조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2. 공적(公的) 쟁점의 문제

최근 고령사회 현상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노동력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정체 내지 하락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30) Global Age Watch Index는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 노인 인권단체인 '헬프 에이지인터네셔널(Help Age International)'이 91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서 발표한 보고서이다. "한국, 노인복지 세계 67위 '낙제점'..소득 '최하위'", 미디어다음, 2013, 10, 01.

더욱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지속적 유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산업전반에 매우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경제성장이 정체될 경우 사회서비스에 충당되어야할 직·간접의 조세(租稅)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와 소비 구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의 배분 등을 비롯한 사회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연령계층간의 갈등 표출이 심각해 질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세대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어 사회통합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따른 공동화발생과 사회공동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서비스 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사회적 위험요인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IV. 고령사회의 위기 대처 방안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개인 혹은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한 개인의 생존 전략이나 정부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척된 선진국의 경험에 근거하거나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구고령화에 관련된 사회문제들, 예컨대 저출산이나 노동시장의 변화들을 논의할 때 주로 이들 선진국의 경험들이 참고 되어왔다. 물론 한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선진국의 경험을 참조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구고령과정의 상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삶의 전략이나 정부정책을 수립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³¹⁾

31) 이성용 외, 「인구변천과 인구고령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의 비교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1호(2011), 551. 한국 정부는 1999년 '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2002년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이 수립, 추진되었다. 이에 비해 '저출

지금까지 노인관련 정책과 사업들은 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의료비, 연금, 부양비 증가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 또는 경제 성장 기반의 약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손실과 사회적 부담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노인을 사회문제의 원인이자 교정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시민이 아닌 사회서비스에 의존하는 수동적 객체로 인식하기 쉽다.³²⁾ 과연 우리사회의 고령층에 속하는 노인들은 공공재를 통한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에 불과한 존재들인가?

비교적 현재까지는 잔여적 차원에서 노인 부양이 이루어졌다 해도 앞으로는 제도적인 개입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투여를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잔여적이고 부정적 인식의 개선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의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노인은 더 이상 우리사회의 소모적 요보호 집단이 아니다.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모든 인간들이 상호연관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의 문제 즉, 고령사회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만 한다.

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다 확장된 틀에서, 고령화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법의 제정, 범정부적 추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2005년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매년 연도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의 내용은 정부 각 부처 소관별로 작성하여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집행중에 있다. 신영전 외,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 고령화 정책 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158.

32) 신영전 외,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 고령화 정책 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147.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공공정책 역시 법과 제도의 강화를 통해 노인세대의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 특히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근로보장 기타 사회복지보장을 법으로 명시하여 노인세대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실체법의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³³⁾에 의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의한 정책추진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 노인세대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로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확대를 통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 노후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치매예방 및 건강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고, 셋째,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돌보미 파견’과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과제 달성,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활기찬 사회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여가 및 자원봉사’활성화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법의 기초역시 노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제들의 내용과 그 취지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상기의 국가차원의 정책과제들에 더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령사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고령사회에서 노인세대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노인고용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비교적 연소(年少)한 노인들의 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한 방법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직종수(職種數)는 약 15,000개에 이르고 있으나, 고령자의 적합직종으로 선정, 개발 보급된 경우는 공공부분의 70개와

33) 이 법의 목적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민간부분의 90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선정된 고령자적합직종이 단순 노무직이나 전문직에 집중되어 있다.³⁴⁾ 따라서 전체 산업현장에서 연소노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정년연장과 같은 정책을 꾸준히 입안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역할의 상실과 지위의 축소에서 오는 심리적 노화의 부정적 면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② 고령자들을 위한 질병과 질환 대책의 방안으로 의료서비스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보호 노인세대들을 위한 간호(보조)인력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들로는 다양한 욕구적 필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자격 조절을 통해 부족한 간호보조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젊은 간호인력들이 서독으로 파견된 경우를 참고하여 외국인 간호보조인력을 대량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③ 노년인구의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노년층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도 고학력의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들 고학력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노인들을 제도적으로 활용하여 노인 유급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지식과 경험이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노인자원 재활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노인세대들이 사회에서 분리

34) 선우 해, 「고령사회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보건복지포럼』(2003년 12월), 37.

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 역시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현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의 가정복지심의관실 아래 노인복지정책과와 노인보건과에서 맡고 있다. 장기적으로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로서 노인청 내지 노인부의 신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 부서들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견실한 사회안전망의 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노인 관련 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 ⑤ 고령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보호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으로서 여성들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보자 돌봄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전에 존재했던 군가산점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사회복지가산점제도를 마련해 일정기간(남자의 군복무처럼 기간을 정해 국가관리하의 사회복지시설 등 파견) 사회봉사를 이수 하였을 경우 취업에 우대하는 정책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풍부한 사회복지활동 인력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있어 막대한 인건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⑥ 현재의 노인연령을 규정하는 역(歷)연령의 순차적 상향화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노인연령 65세의 기준은 1883년 독일의 사회보험도입 과정에서 정한 노인연령으로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순차적으로 68세, 7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⑦ 노인세대를 연소노인과 중노인, 고령노인으로 분류하여 각 층에 맞는 정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의 내부 연령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순히 노인 정책이 모든 연령대의 노인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노(老老)세대, 부부세대 노인,

독거노인, 학대노인, 등 대상 집단에 따른 전문적 사회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보호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노인전용 공동생활가정의 모델을 개발하고 확충하여 가급적 자립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방지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에 있다 해도 이마저 불가능한 가정의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⑧ 임종기를 맞는 노인과 가족들을 위한 호스피스 시설 설치의 확대와 가칭 죽음학교 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시설로서의 장례공간과 장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죽음으로 비롯되는 가계의 비용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고령 사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과 가족들이 사후의 처리조차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욱 많아 질 것이다. 따라서 장례와 관련된 절차들을 시장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이 연구는 일반화되어 있는 고령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았던 서구의 많은 나라들과 이웃한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의 마련은 길게는 수십년에서 짧게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10여년의 짧은 기간에 사회적 의제로서 고령사회 관련 공공정책의 마련과 민간차원의 노력에 경주(競

走)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사회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첫째,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과 생존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제적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의 특성상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과 부양과 돌봄에 제한적인 가족 기능으로 인해 사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불안감이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대한 위기적 요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고령사회 정책 방향은 노인인구들에 대한 사회문제화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이들 노인세대들의 노년 생활에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여생을 행복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4항 등에서는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 짓고 있다. 이에 더해 민간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관련 활동들의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막연한 불안적 요소이거나 통계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만이 강조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고령사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사회 경제적 안전망의 확보를 통해 노년기를 희망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 누구에게나 노화된다는 두려운 것이며, 노인의 시기가 불행하고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다. 그러나 고령사회란 단지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에 비해 증가되었다는 인구학적 수치의 변화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 또한 노인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경감

되고 질병에 취약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줄어든 것일 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인구의 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사실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령사회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의 사회복지의 주된 대상층과 주체가 노인세대들이라는 점을 주지한다면 고령사회는 결코 두렵고 위험한 사회가 아닌 건강하고 밝은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강욱모.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돌봄 서비스정책 과제」. 『경남발전기획특집』. 2010. 36-47.
- 고재욱 · 황진수. 『노인복지론』. 파주사:양서원, 2013
- 김용진 · 이철인. 「고령화에 의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장기적 메커니즘」.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1호, 2013. 1-59.
- 민세진. 「우리나라의 고령화 취약성」. 『한국경제학보』. 제19권 제1호. 2012, 49-80.
- 박명호. 「한국과 EU의 고령화 비교연구」. 『EU학 연구』. 16권 1호, 2011. 99-126.
- 박선태 · 최병태 · 서보준 · 송은희 · 김유진. 『노인복지론』. 고양시:공동체, 2012.
- 선우 혜. 「고령사회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보건복지포럼』. 2003년 12월. 33-44.
- 신영전 · 김보경.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 고령화 정책 계획: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0집 제1호. 2013. 145-186.
- 안종범. 「저출산 · 고령화시대의 재정정책과제」. 『연구총서』. 97-10-1, 2010. 2-109.
- 우국희. 「고령화 시대의 노인과 위험 담론」. 『노인복지연구』. 통권 53호, 2011. 261-280.
- 정순들 · 김성원. 「사회복지 분야 ‘고령화 사회’ 연구동향: 인식과 대책」. 『사회과학연구논총』. 27권, 2012. 275-311.
- 정환수. 「한국사회 노인문제에 관한 철학적 고찰」. 『철학논총』. 제71집, 2013. 335-354.
- 조현상. 「高齡社會 사회복지주체로서 教會役割에 관한 연구」. 『신학과 문화』. 제22집, 2013. 303-328.
- _____. 「高齡社會 노인의 사회적 危險에 관하여」. 『신학과 문화』. 제21집, 2012. 245-268.
- 차홍봉.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가족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추계학술대회. 2010. 3-14.
- 최재현.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6권 제2호, 2013. 233-246.

- “2011 고령자통계”, 통계청(<http://kostat.go.kr>), 2012. 09.27.
- “노인 100명 중 77명이 ‘가난하다’”, 한국일보, 2013, 08, 28.
- “늙어가는 대한민국..노인들이 진료비 36% 썼다”, 헤럴드경제, 2013. 09.13.
- “속도 빠라진 고령화...일본 닮아가는 한국사회”, 동아일보, 2012, 4, 27. 제8면.
- “자살老 내모는 사회”, 매일경제, 2013, 09, 06.
- “장래인구 추계”, 통계청(<http://kostat.go.kr>), 2011.
- “한국 인구 2030년 5천 200만명 ‘정점’”, 연합뉴스, 2011, 12, 7. 제7면.
- “독거 노인 125만명..고독사 위험에서 구하라”, 미디어다음, 2013, 10, 03.
- “한국, 노인복지 세계 67위 ‘낙제점’..소득 ‘최하위’”, 미디어다음, 2013, 10, 01.

논문투고일: 2014. 10. 30.

심사개시일: 2014. 11. 14.

게재확정일: 2014. 12. 06.

 • 국 문 초 록 •

최근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하여 노인관련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의 추세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제기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사회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첫째,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과 생존의 안정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제적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며 둘째, 노인의 특성상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과 노인 부양과 돌봄에 제한적인 가족 기능으로 인해 사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불안감이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고령시대의 노인문제는 노인세대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해결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우리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과, 인구고령화가 막연한 불안적 요소이거나 통계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만이 강조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고령사회의 위험성이란 노인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경감되고 질병에 취약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줄어든 것일 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인구의 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이 고령사회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복지의 주요한 대상층의 한 부분이 노인세대들이라는 점을 당연시 한다면 고령사회는 결코 두렵고 위험한 사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고령사회, 새로운 사회적 위험, 노인 소득, 노인 부양, 사회복지제도
